

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평가(1)

외교안보 분야 : 美 · 日 · 中 관계

2025년 9월 5일 (금)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평가(1)

- 외교안보 분야 美·日·中 관계 -

2025. 9. 5. (금).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연구위원 이윤식

□ 대미외교: 전대미문의 ‘분식외교’

- 세계 질서가 자국우선·경제안보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합의문 조차 없는 ‘분식외교’로 막을 내림
- 3,500억 달러 투자펀드 등 막대한 제안에도 실질 성과 전무, 안보 공약도 문서화 실패
- 결과적으로 ‘퍼줄리즘 호구외교’로 전락하며, 동맹 신뢰 약화 우려만 남김

□ 대일외교: 내가 하면 실용, 네가 하면 굴욕

- 셔틀외교, 산업·안보협력 등에 합의했으나, 실체없는 ‘미래지향적’ 강조에 그침
- 前 정부 한일협력을 “굴욕”이라 비판하던 민주당이 집권 후 동일 행보를 “실용 외교”로 포장 → ‘내로남불’의 극치
- 오염수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내로남불은 야당·시민단체·피해단체 등 국내적 반발을 불러, 추후 갈등 재점화 가능성 불배제

□ 대중외교: 쇼만 있고 실리는 없는 ‘썰썰 외교’

- “중국을 중요한 파트너”로 칭송했으나, 말잔치 외에 관광·한류·수출 등의 실익은 부재
- 워싱턴에선 “안미경중 폐기”, 베이징에선 “전략적 협력 동반자” 발언 → 이중 메시지는 미·중 모두에게 신뢰 상실 빌미
- 대중 굴종적 태도와 성과 부재가 합쳐져, 향후 국익을 심각히 훼손시킬 우려

I. 정부 출범 100일 의미 및 국정운영 총평

○ 향후 국정운영 보여주는 「리트머스」

- 100일 평가는 새정부가 국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태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, 향후 국정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시간
- 미국은 1933년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강력한 뉴딜 정책을 펼쳐 경제를 회복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‘대통령 취임 후 100일 평가’를 중요하게 여김
- 특히, 이재명 정부는 입법·사법·행정 3권을 장악한 막강 권력을 가진 만큼, 그 힘을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선용하는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

○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100일

- 유례없는 무소불위 국가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,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「맹탕 100일」
- 가시적 성과가 없는데도 화려한 말잔치로 지난 100일을 과대 포장

○ 외교안보 이슈는 90% 이상 대통령의 능력

-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안보 대전략이 없고 대통령 특유의 임기응변에 치중한다는 느낌과 함께 과연 준비된 대통령의 유능함이 있는지 의심스러움
- ※ 미국 정치학자 애런 와일다브스키(Aaron Wildavsky)는 「두 개의 대통령 이론」(Two Presidencies Thesis)에서 “대통령에게는 두 개의 대통령직이 있다. 하나는 내치를 위한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외교를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하면서, “외교·안보 분야의 경우 대통령의 판단력·리더십이 성과를 좌우한다”고 강조

○ 외교안보 성공은 내치(內治)에서 출발

- 한편에서는 극한의 정치보복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안보에 성공하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임
- 제1야당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기존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 제1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며 초당적 총력전을 펼칠 때, 李 정부의 외교안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

II. 주요국(美·日·中) 외교 평가

① 대미 외교 평가

□ 대미 외교의 중요성

○ WTO체제에서 '턴베리체제'로 대전환하는 시점

- 세계경제는 더 이상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만으로 작동하지 않음
 - ※ '턴베리 체제'(Trump-Berried System): 트럼프 대통령 복위와 함께 본격화된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, 양자협상, 경제안보 중심 구조를 뜻함
- 관세·보조금·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 무기화가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했으며,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곧바로 '무역 불이익·공급망 이탈'이란 위기에 직면
- 이에 한국에게 대미 외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제도적 적응

○ 트럼프 주도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 '대전환'

- 2025년 1월,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동맹국과의 방위비 협상 재개, 공급망 재편, 인-태 동맹 강화를 강하게 추진 중
-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, '글로벌 판 대전환'으로 평가할 수 있음
- 한국도 이 대전환에 올라타,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함. 준비없는 외교는 국가 경쟁력 상실로 직결될 수 있음

○ 죽고사는 문제인 안보,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융합된 국익외교의 최정점

- 대미 외교는 △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, △인-태 안보협력, △반도체·에너지·원전·AI 등 첨단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국익외교의 최정점
- 따라서 대미 외교의 성패는 한국의 10년 미래를 결정할 변수이며, 국익 국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큰 그림이 절대적으로 요구
- 구호와 포장만으로 버틸수 없음. 철저히 준비된 문서/계약/실행 계획이 동맹 신뢰의 본질임을 명시해야 함

□ 평가

1. 전대미문의 「분식 외교」

○ 합의문 없는 이례적이고도 비정상적 외교

- 당초 정부가 정상회담에 앞서 제시했던 3대 목표인 △경제통상 안정화, △한미 동맹 현대화, △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도 합의문으로 명료화되지 않았음
- 회담 직후(25.8.25)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, “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됐다”고 했지만,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래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해 왔던 걸 감안하면, 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
 - ※ 미·이탈리아 정상회담(4.17), 미·인도 정상회담(2.13), 미·일 정상회담(2.7) 후 각각 공동성명 발표

○ 가시적 국익 확보 없이 성과 부풀리기로 국민 호도

- “(한미 정상회담 3대 목표) 세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”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 제기
 - ※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반도체·자동차 관세, 원자력 협력 등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힘
 - ※ 실제로 정부는 차·부품 관세 15%(현재 25%) 등을 명문화하려 했으나 불발
-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“韓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결국 합의를 준수했다”, “우리는 합의를 지켜냈다”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점도 회담 성과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
-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3,500억달러(약 487조원) 대미 투자펀드 조성, 한국 기업의 1,500억달러(약 208조원) 대미투자 등 美 정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점, 그 자체가 바로 ‘외교 실패’라는 평가

○ 쌀·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불투명

- “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선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”는 것이 정부 설명(8.25. 대통령실 브리핑)
- 반면 미국 정부는 “미국 농민과 제조업자,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 해낼 것”이라 밝히는 등 시장 개방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(8.25.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)

2. 나라 곳간 거덜 내는 최악의 「퍼줄리즘 호구 외교」

○ 나라 기둥 흔들리고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될 정도의 막대한 국부 투입

- 정부가 제안한 대미투자 펀드 3,500억달러는 우리나라 GDP의 19% 규모
※ 한국은행 발표, 2024년도 한국 명목 GDP 2,557조원

○ 3,500억달러 투자펀드 성격과 용처 등 놓고 한미간 다른 주장

- 정부에 따르면, 실제 돈은 5%만 투자되며 대부분은 대출·보증 등으로 조성하되, 양해각서(MOU)로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식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함
 -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의 성격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
- 그러나 美 정부는 직접 투자액을 최대한 늘리고 구체적 이행 계획도 필요하다는 입장
※ 8.26.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은, “한국의 대미 투자금으로 미국의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”할 것이라고 함
-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사실상 백지수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

[표 1]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韓美 양국 정부 입장 및 시각차

쟁점	한국정부 입장	미국정부 입장	양국 시각차
펀드 성격	우선 큰 틀만 합의한 비구속 협약 (세부내용 추후 협의)	세부 문서와 구조를 미리 정해놓기를 원함	韓 “약속만 해둔 상태” 美 “계약서부터 쓰자”
투자 방식	대출·보증 위주 (직접 투자 비중 적음)	직접 투자(지분투자) 비중 확대 요구	韓 “빌려주거나 보증하겠다” 美 “직접 투자할 것”
이익 배분	“미국이 90% 가져간다는 건 사실 아님” 반박	투자 수익 90% 미국 귀속	수익 배분 비율 두고 시각차 존재
사용처	전략산업 (반도체·배터리·핵심광물·AI·바이오·조선 등)	미국 내 전략 산업역량 강화 (에너지·반도체·조선 등) 지원	韓 “첨단산업 육성에 쓰자” 美 “자국 인프라도 포함”
운영 방식	한국정부가 태스크포스 꾸려 위험 줄이려 함	사전 설계서 제출요구	韓 “리스크 줄일 장치 필요” 美 “구체 설계서 제출”
교환 조건	관세 상한, 비관세 규제 완화 등과 연계 원함 *참고: 관세 15% 상한은 원칙 교감 수준, 최종 문서화 안 됨	농업시장 개방·방위비·주한미군 기지 등을 묶어서 함께 처리 요	韓 “펀드 ↔ 통상 교환” 美 “펀드 ↔ 통상+안보 패키지”

※ 출처 : 대통령실 브리핑 및 언론보도 종합

○ 「네가 하면 퍼주기 외교, 내가 하면 실용 외교」

- 정작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(23.8.18)에 대해 “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했다”며 “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”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

* 23.8.20.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“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습니까?” 中

3. 반미·친중 「이미지 세탁 외교」

○ 대통령의 반미·친중 이미지 세탁 위해 천문학적 비용 지불

- 정부는 공동성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간 관계 복원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李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희석하는데 큰 비용을 치른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

- 정부의 이런 태도는 李 대통령의 반미·친중 이미지 때문에 소위 「젤렌스키 모멘트」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

* 젤렌스키 모멘트 : 24.3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중 공개 설전을 벌인 외교참사를 지칭

* 25.8.25. 美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SNS에 게재한 메시지



“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? 숙청 혹은 혁명 같다.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”

* 이재명 대통령 반미·친중 과거 발언

- “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美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” -21.7.1. 대선 출마선언 직후 경북 안동 이육사 문학관 방문 中
- “왜 중국에 집적거리냐… 그냥 중국에도 ‘세세’, 대만에도 ‘세세’ 하면 되지. 중국과 대만의 국내 문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나?” -24.3.22. 충남 당진 총선 유세 中

4. 안보 신뢰 공백 심화

○ 안보 핵심 사안 가시적 성과 없음

- 확장억제·전략자산 전개·연합훈련 등이 문서로 남지 않아 우리나라 안전보장 체계가 구두 합의 수준에 머무름
- 이는 한미동맹의 본질적 신뢰 축을 약화시키고 북한·중국·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
- 특히 尹 정부의 <워싱턴선언>과 <캠프 데이비드 합의>(확장억제 강화, 핵협의그룹 출범)는 문서화와 공동 발표로 국제사회에 공표된 것에 비해 이번 회담은 그와 정반대 결과를 보여줌

○ 주한미군 기지 토지 소유권
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꺼낸 주한미군 기지 토지 소유권 문제는 '주권 레드라인'을 흔든 사례라는 지적
-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토지 소유권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
- 그러나 향후 방위비 협상이나 기지 이전·운영 비용 문제 등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질 경우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

□ 향후 전망

○ 자동차 관세 지렛대로 미국의 추가 압박

- 미국의 협상력이 높아져 우리 정부가 구두로만 약속한 투자·조달 계획은 향후 미국의 무역·방위비 협상에서 카드로 쓰일 수 있음
- 「문서 없는 합의」는 결국 한국만 손해 보는 구조

○ 억지력 공백으로 인한 비용 상승

- 문서화되지 않은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이 도발時 실질 대응을 보장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작용할 우려
- 이는 동맹의 본질인 신뢰의 핵심 축에 대한 공백을 확인한 것으로, 추후 유무형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

② 대일 외교

□ 8.23 한일 정상회담

○ 한일 관계 규정

- 양국을 “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파트너”로 규정
- 국교정상화 60주년의 기반 위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약속

○ 주요 합의사안

- 셔틀외교 조기 재개, 인도-태평양 대응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, 수소·AI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, 저출산·고령화·재난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위한 협의체 구성, 한반도 비핵화·항구적 평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, 납치 문제 해결 협력 등

□ 평가 : 「내로남불 외교」의 극치

○ 네가 하면 친일, 내가 하면 실용

- 이재명 정부의 전형적 말바꾸기식 내로남불 외교
 - * 尹 정부 당시 대일 협력 외교를 “굴욕 치욕”이라 비난했으면서 집권 후에는 실용 외교로 포장
- 李 대통령을 비롯해 現 정부 핵심인사는 그동안 친일 프레임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익을 취해왔음
 - *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동 사례가 대표적
 - * 그러나 지금은 “IAEA 기준 안전”이라며 오염수 문제를 사실상 용인

*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 선전선동 발언

▲ 이재명 민주당 대표 (現 대통령)

“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… 정부는 왜 반대한다는 말도 못하냐.” -23.6.17, 인천 규탄 집회
“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‘제2의 태평양전쟁’” -23.8.23, 최고위원회의

▲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/수석최고위원 (現 국무총리)

“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보상이라도 일본 정부에 받아내라 … 막지도, 배상도 못하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나. -23.8.24, 정책조정회의
“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~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. 1년이 지났는데 별일 없지 않냐란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” -24.8.23, 최고위원회의

▲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(現 여당 대표)

“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실 만큼 깨끗하다면 대통령실부터 ‘후쿠시마표 오염생수’를 마셔라.”

-23.5.26, 최고위원회의 영상 발언

“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일본 대변인 역할 … 오염수는 그냥 일본 땅에 묻으면 된다, 다만 돈이 많이 드니 바다로 뿌리려는 것.” - 23.7.24, 시사저널 인터뷰

○ 외교 규범의 일관성 상실

- 尹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(2023.3.6)에 대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“외교 사상 최대 굴욕”이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면서 이번엔 후속이행 장치 없이 ‘미래지향’이란 말로 포장했다는 비판 제기

* 민주당 친일 프레임 선거 활용 사례 (2020년 4월 총선 당시)

- 민주당 「21대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」 (각 후보에 전달)
 - “미래통합당은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하며 일본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 한다…일본 정부에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우리 정부는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통합당을 심판해달라”는 메시지를 선거에 활용토록 제안
- 민주당원 친일 프레임 선거 활용 보고서 (「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」(2019년))
 - ‘일본의 수출 규제(2019년)로 인한 한일 갈등이 21대총선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’으로 분석

○ 실제 없는 ‘미래지향’

- 청정에너지·AI·안보 협력 등 모호한 합의만 존재할 뿐 구체적 이행 계획·책임자·재원 조달 방식은 명시되지 않음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이 없는 ‘립서비스 외교’라는 지적 나옴

□ 향후 전망

○ 국내 갈등의 재점화 가능성

- 오염수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내로남불은 야당·시민단체·피해자 단체의 반발을 불러, 한일관계 진전을 정치화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

○ 대일 협상력 약화 가능성

- 구체적 이행 로드맵 부재로 일본 내 보수·관료층이 한국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, 후속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가 무시될 우려 제기

○ 한미일 삼각 협력 내 취약 고리

- 일본과의 신뢰 기반이 약할 경우 미국과의 3자 협력 구도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저하되고, 결국 한미동맹마저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음

③ 대중 외교

□ 이재명 정부의 대중외교 노선

○ 전략적 협력 동반자 및 관계 정상화

- “중국은 중요한 파트너…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만들자.” (李 대통령, 25. 6.10. 중국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 직후 SNS 게시)
 - * “중국이 한반도 평화·비핵화에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.” (같은 날 통화, 청와대 브리핑)
- 25.8.26. 박병석 중국 특사단장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경주 APEC(10.31~11.1) 정상외교 참석을 요청하는 등 관계 정상화 의지 강조

○ 안미경중(安美經中) 사실상 폐기

- “과거에 한국은 안미경중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지만,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”, “정치·안보는 신중, 경제는 실용” (李 대통령, 25.8.26, 워싱턴 CSIS 정책연설)

□ 정부 출범 후 對中 관계 상황

○ 긍정적 변화 없이 답보 상태

- 정부의 적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응은 원론적
 - * “건전·안정적 발전, 공동이익 확대” 같은 표현만 반복했을 뿐 관광 재개나 한류 규제 완화, 비관세 장벽 해소 같은 구체적 조치 없음

○ 대중 수출 지표 여전히 부진

- 25. 8월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은 -2.9% 감소, 같은 시기 전체 수출이 +1.3% 증가한 것과 대비

○ 공급망 리스크 심화

- 미국은 대중 반도체 장비 예외를 철회했고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공장은 규제 부담이 가중

○ 안보환경 악화

- UN 대북제재 패널 종료, 북한의 미사일능력 증강, 북·중·러 군사협력 강화 등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

□ 평가 : 「췌췌 외교」의 종말

○ 실질 성과 없이 임기응변적 접근

- 이재명 정부의 대중 외교는 겉으로는 「관계 정상화」와 「경제 실익 회복」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·중 경쟁 구도 속에서 눈치만 살피는 임기응변적 접근에 불과
- 중국과 관계 복원 신호를 교환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우리의 입장이 모호해지며 국익이 흔들리는 결과만 초래
 - * 관광·한류 규제, 비관세 장벽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전무
- 국익 중심 전략이 결여된 「췌췌 외교」의 종말이며 “쇼맨십만 있고 실리는 없는 민주당식 외교”의 전형이라는 평가

○ 굴종주의적 외교태도 일관

- 李 대통령은 야당 시절 “췌췌(謝謝)만 하면 된다”고 했고 집권 후에도 똑같이 “중국은 중요한 파트너”, “전략적 협력 동반자”만 반복
- 집권 후 표현만 소프트 해졌을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‘중국 눈치 보기 외교, 굴종 외교’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 나옴
- 국익보다 중국 비위 맞추기에 집중하는 태도로 대한민국 외교 주권과 자존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
 - * 결과적으로 ‘先 굴종, 後 성과 부재’라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

○ 안보 현실 외면

- 북·중·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“중국의 비핵화 관련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”는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에 불과하다는 지적
- UN 대북제재 무력화, 중국의 대북 군사·경제 지원이 노골적인데, 이를 외면한 채 중국의 ‘선의’를 믿는 건 국가안보를 도박판에 올린 것과 같음

○ 외교 시그널의 혼선 초래

- 미국 워싱턴DC에 가서는 “안미경중은 이제 불가능하다”며 대중 경계 발언을 하고 중국 베이징에는 “전략적 협력 동반자”라며 관계 정상화를 구걸
- 이중 메시지는 양쪽 모두에게 불신만 주고,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, 동맹간 신뢰에 균열을 남김

□ 향후 전망

○ 시나리오-1 (부분 성과)

- APEC 정상외교를 계기로 상징적 만남은 성사될 수 있으나 실질적 경제·안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가능성

○ 시나리오-2 (역풍 심화)

- 미·중 기술패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운영과 수출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
- 이로 인한 경제 회복 모멘텀은 오히려 둔화될 수밖에 없음

○ 시나리오-3 (안보 연계 악화)

- 북한의 대러 군수 협력, 미사일 생산능력 강화, 중국의 정치적 지원이 심화되면 우리의 안보 부담은 커지고 한중 경제협력은 더욱 정치·안보 변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